

# 식품산업 진흥정책 현황 및 향후과제

전한영 서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1. 들어가며

白虎의 2010년이 밝았다. 2010년은 세계경제가 침체 속에서 기지개를 펴고, 국제 곡물가격의 안정세, 환율 하락 등으로 식품업계에 호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높은 원자재 가격 등으로 힘겨운 2008년과 2009년을 지나면서도 새 정부 들어 식품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주목을 받아왔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관련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 전체 부가가치의 10%, 고용의 17%를 차지<sup>1)</sup> 한다는 연구결과<sup>2)</sup>가 있다.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농식품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다.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 외에도 식품이 지닌 새로운 가치에 더욱 관심을 갖게 이르렀다. 단순한 영양공급에서 떠나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등 식품의 가치가 새롭게 이동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열풍을 일으킨 한식세계화는 이러한 가치 인식을 뒷받침해 주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관련산업 포함)의 부가가치는 92,6원으로 국가전체(920조원)의 10.1%, 종사자수는 398만명으로 국가전체(2,358만명)의 16.9% 차지

2)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 KREI, 2008. 12월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한지도 2년을 지나고 있다.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우리의 식품산업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많은 식품안전 사고와 사회적 파장 속에서도 깨끗하게 식품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왔고, 그 결과 2008년에는 사상 최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2009년 히트상품으로 막걸리가 1위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그 동안 계속 늘어오던 와인과 위스키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오히려 막걸리가 뛰어 올랐다. 수출도 전년대비 43%나 증가하였다. 오랜 세월 서민의 술로 치부되던 막걸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사례였다. 많은 해외 외신들은 우리 한식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제 우리의 식품이 지닌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식품업계의 오랜 세월 고군분투해 온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여기에 정부도 식품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식품을 하나의 산업으로, 그것도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보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 작용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 이제 두 걸음을 떤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이 길은 식품업계도, 정부도 혼자 갈 길이 아니다. 정부도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내용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가고, 업계도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등 각자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금까지의 식품산업 진흥정책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KREI)

□ 부가가치 (단위: 10억 원)				□ 종사자수 (단위: 천명)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국내 총부가가치	814,686.1	874,782.0	920,331.0	총종사자수	23,151	23,433	23,577
농림어업(A)	25,751.2 (3.2%)	25,208.8 (2.9%)	23,441.1 (2.6%)	농림어업(A)	1,785 (7.7%)	1,726 (7.4%)	1,686 (7.2%)
식품산업(B)	27,649.9 (3.4%)	25,614.4 (2.9%)	31,172.9 (3.4%)	식품산업(B)	1,636 (7.1%)	1,692 (7.2%)	1,711 (7.3%)
음식료품 및 담배	11,279.6 (1.4%)	10,810.0 (1.2%)	12,439.1 (1.4%)	음식료품 및 담배	185 (0.8%)	191 (0.8%)	191 (0.8%)
외식업**	16,370.3 (2.0%)	14,804.1 (1.7%)	18,733.8 (2.0%)	외식업	1,450 (6.3%)	1,500 (6.4%)	1,520 (6.4%)
농림어업 관련산업(C)	36,671 (4.5%)	37,326.1 (4.3%)	37,981.7 (4.1%)	농림어업 관련산업(C)	625 (2.7%)	597 (2.5%)	584 (2.5%)
농림수산식품산업 전체(A+B+C)	90,072.1 (11.1%)	88,149.3 (10.1%)	92,595.7 (10.1%)	농림수산식품산업 전체(A+B+C)	4,046 (17.5%)	4,015 (17.1%)	3,981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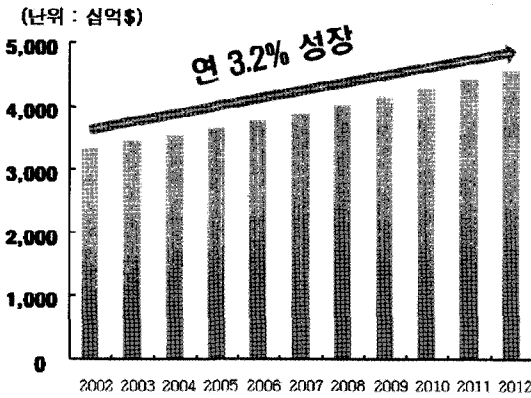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각 연도별 부가가치 자료  
 \*\* 외식업은 '음식점 및 숙박업'의 부가가치에서 매출액에 비례하여 추정  
 - 음식점과 숙박업 매출액 비율: (08) 81: 159 (07) 61: 149, 08년은 07년치로 추정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09

3) 2008년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매출액은 120조원으로 2007년 대비 14.1% 성장

## II. 식품산업 진흥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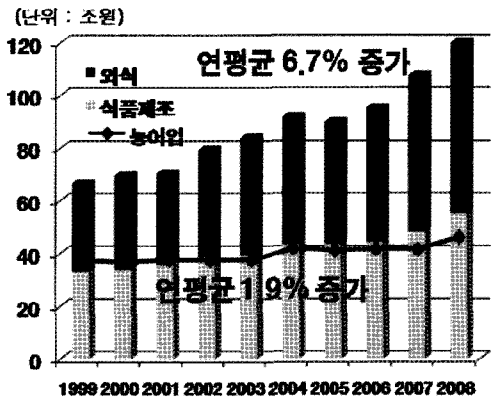
### 1. 세계 및 국내 식품시장 현황

세계 식품시장은 인구증가 등과 더불어 지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리서치&컨설팅 기관인 Datamonitor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식품시장은 약 4조 달러로 추정되며, 세계 인구증가 등과 더불어 매년 3.2% 성장하여 2012년에는 4조6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국내 식품시장은 농어업 성장은 정체된 반면,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은 연평균 6.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그림 2),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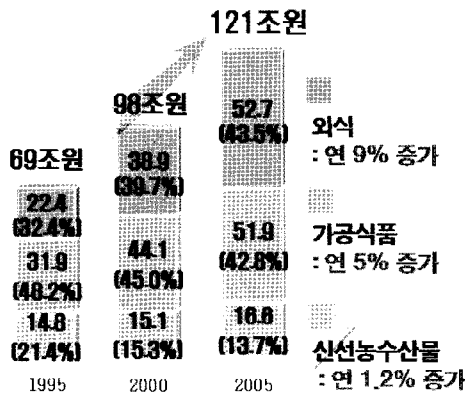
(출처: Datamonitor)

<그림 1> 세계식품시장 현황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그림 2> 국내 식품산업 현황



<그림 3> 식품소비시장 현황

한편, 소비기준으로 본 국내 식품시장은 2005년 기준 약 1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 이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로부터 추정된 결과이며, 전체 시장은 연 5.8%씩 증가하고 있다.

소비시장을 부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신선농수산물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외식과 가공식품의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증가로 인한 식생활의 간편화와 외부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2. 식품산업 진흥정책 추진현황

2008년 2월 정부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식품산업진흥법'의 시행(6.28) 등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식품산업을 2012년까지 매출 150조원, 고용 178만명 등의 규모로 육성하는 목표 하에 ① R&D 투자 확대 등 인프라 강화, ② 식품클러스터 등 수출기반 조성, ③ 발효식품 등 한식의 세계 명품화 등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009년 4월에는 한식 세계화 5대 전략을 수립하고 한식세계화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우리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추진도 시작되었다. 5월에는 국가 신성장동력 17대 과제에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과제'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5.27)되어 그 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이던 식생활 교육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8월에는 전통주 등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 발표되었고, 11월에는 전북 익산지역에 동북아 식품 허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상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도로 국내 식품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그 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은 아직 채 2년이 되지 못하였다. 비록 식품진흥정책의 추진 등으로 식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식품업체, 식품관련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우리 식품산업이 처한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고 앞으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 Ⅲ. 식품산업의 대내외 여건

### 1. 식품산업의 여건

식품산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산업이다. 시장개방의 가속화, 글로벌 경쟁 심화, 세계적인 식량위기감 고조 등은 식품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미 FTA 비준, 아태·중국 등과의 자유무역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식품기업인 Danone이 세계 1위 액상 요구르트 'Activia'를 국내에 출시한 사례도 있고, 쌀을 비롯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것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식품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이러한 위기들은 한편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2010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이나 2010~2012년간의 한국방문의 해는 우리 식품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식품 소비의 편익화·고급화, 건강과 웰빙 추구 등 소비자의 다양한 가치 추구는 위협이 됨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 (1) 식량 위기 도래

세계는 지금 식량위기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식량수출 규제, 식량 폭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제 쌀 가격이 태국산 기준 2004년 톤당 200달러에서 2008년 760달러로 4년 동안 4배가 폭등한 사례가 있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내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출 관세 부과(중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수출 중단(인도), 신규 수출계약 중단(베트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식량 위기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고 필리핀에서는 쌀가게에 군대를 배치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식량위기 상황은 여러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거대인구 국가인 인도, 중국의 인구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소비가 증가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1인당 육류소비가 1985년 20kg에서 2006년 50kg으로 150%나 증가하였다.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 8kg이 소요된다고 한다. 늘어나는 육류 소비에 따라 그만큼의 곡물 생산 증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상이변으로 인해 호주의 밀 생산량이 2,500만톤에서 980만톤으로 감소하였다.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 또한 식량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연간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 1을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하고, 브라질에서는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2배,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4배가 증가하였다.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곡물 생산비 및 운송비가 증가하고, 도시화·사막화 등으로 인해 매년 180만ha의 농경지가 감소하는 것도 곡물 부족 및 국제 곡물가 상승을 초래한 원인이다.

이 밖에도 식량위기를 암시하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식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식품 정책이나 식품업계의 경영전략 수립 등에 근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도래가 될 것이다.

**(2)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고조**

중국산 식품 멜라민 파동(2008), 미국산 쇠고기 BSE 논란(2008), 김치 기생충알(2005), 불량만두소(2004) 등은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최근 약 5년간 국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수입 농식품의 증가와 외식소비의 확대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사태 등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웰빙식품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증가와 유기 가공식품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식품안전 문제는 식품과 관련된 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3) 급격한 식품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식품영양 불균형 심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비만비율, 당뇨병 발생 등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결식, 가족간의 식사 붕괴 등 잘못된 식습관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패스트푸드 섭취와 육류 소비가 증가하여 입맛이 획일화되고 식재료의 종류가 단일화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온실가스 증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는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식품의 생산·공급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여 미항공우주국(NASA)는 2012년에 북극의 빙하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로 지구는 환경 위기와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였다. 즉,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신흥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의해 에너지와 자원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외식문화의 확산과 푸짐한 상차림 선호 등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식량자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18조원 정도 되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도 6천억원이나 된다.

**2. 2010년 경제전망과 식품산업**

2010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10월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를 2.5%에서 3.1%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런 반면, 고용부진·금융부실·출구전략에 따른 부작용(더블딕)·유가상승 등은 경제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 미국의 퇴조 및 중국의 입지 강화 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국 경제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메시지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6%, 3/4분기에 2.9%로 증가하였으며, OECD는 2010년 한국의 경제가 4% 성

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한편 우리 경제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약화된 성장잠재력, 높은 대외 의존도, 성장과 고용간 괴리의 심화, 양극화 심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2010년 국내 식품산업의 경기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 2008년 식품시장 규모(식품 제조업 출하액+외식업 매출액)는 119조9천억원으로 2007년 109조5천억원에 비해 14.7%가 증가하여 1999년 이후 최고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식품 제조업은 55조2천억원, 외식업은 64조7천억원으로 2007년 대비 각각 14.7%, 13.6%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식품 시장의 성장 추세는 국내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IV.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식품산업 진흥정책은 이제 막 두 돌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이 있다. 산재된 과제들은 정부가 독단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며, 식품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0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제는 향후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 1. 식품업체 체질 강화

식품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낮은 수익성 등일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8천5백여개 제조업체 중 종업원 50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56%나 된다. 외식업체의 경우에도 26만개의 한식업체 중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억원 수준이다. 특히 음식점은 3D 업종으로 여겨져 취업을 기피하는 추세이고 식품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음식점 당 평균 종사자 수는 28명으로 일본(7.3명), 미국(17.9명)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업체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들이 요구된다. 식품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긴요하며, 식품과 관련된 통계·정보 인프라의 강화도 요구된다. 특히, 식품관련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들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연이 연계된 실습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식품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관련 통계·정보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식품외식정보사업'을 통해 식품의 원료조달부터 소비단계까지 푸드시스템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DB 구축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관련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시설자금 융자지원 위주이던 정책자금을 2010년부터 조성할 모태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 고부가 전략산업 기반

식품산업이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종합 플랫폼 조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전북 익산지역에 조성을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0년내에 '클러스터 내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착공,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클러스터내 식품기업 지원을 위해 3대 R&D센터(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등 H/W와 S/W 지원을 병행하여 식품기업, 연구소 등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의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능성소재, 첨가물, 향료 등 식품소재와 식품기계, 설비, 주방기기 등은 국내 시장규모가 작고 기술력의 차이 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 소재, 기자재 분야의 국산화율 제고 및 해외진출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 우선 2010년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자재 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산 소재 및 기자재를 전시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3. 식품 R&D 강화

무엇보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R&D 투자가 중요하다. 2008년 기준 국내 식품분야 R&D 투자 규모는 4,042억원이다. 정부가 1,176억원(29%), 민간이 2,866억원(71%)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국가 전체 R&D 투자의 1.3% 수준이다. 이러한 투자 규모는 식품기업의 매출액 대비 0.7%인데, 제조업 전체의 2.8%, 해외(EU) 식품기업의 1.4%에 비해 적은 규모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식품 R&D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33~65%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 원천·응용기술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세부내역으로 투자되던 식품분야 R&D지원을 2010년에는 별도 사업으로 독립시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183억원), 식품 기능성평가(14억원)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중심의 분야별 기술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10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하는 「식품업계 현안기술 10대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4. 안정적 원료 수급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26.2%로 식품산업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관세(농식품 평균 관세율 63%)는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TRQ) 및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실수요를 파악하고 수입관리체계 개편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식량자급율의 개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곡물 중심의 식량자급율의 개념을 식품 개념으로 확대하고 자국 생산 중심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의 확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해외 영농시설과 해외에서의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여 해외농업개발도 이러한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5. 해외진출 지원

2009년 농식품 수출은 약 48억불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것인데, 물량 기준으로는 19%가 증가한 것이다.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다. 식품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식 세계화, 수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식 세계화는, 2010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식재단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전통성·우선순위 등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상품성 및 산업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융통성 있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G20 정상회담, 한국 방문의 해 등 국제행사 마케팅을 통해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한식업체의 해외진출과 식재료 수출 등과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농수산물 중심의 지원을 가공식품, 식재료 등 까지 확대하고 식품기업의 해외 식품박람회 등의 참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식품의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 브랜드 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 6. 식품 표시·인증제도 개편

현재 농식품과 관련한 인증제도는 유사한 종류도 많고, 그 체계가 복잡하여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하고 인지도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15종의 인증제도가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 별로 운영되는 인증제도까지 더해져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가공식품(KS제도), 전통식품(명인제도), 지리적표시 등은 품목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고, 유기 농산물(원료)과 유기 가공식품(제품)과 관련한 인증제도도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식품 표시·인증제도를 개편, 통합하는 등 보다 알기쉬운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동일·유사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기 농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을 통합한 유기식품인증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인증표시를 2종(일반인증, 특별인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인증제도통합법의 제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7. 품목별 전략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고부가 전략 품목 개발·지원을 품목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발효식품, 장류 등의 슬로우푸드를 비롯하여, 조미료, 면류, 가공무역식품 등 식품 종류별, 품목별로 전략을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막걸리의 경우 제도개선(품질등급제, 원산지표시제), 연구개발 강화, 고가 마케팅 등 고급화 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3억원인 시장을 2012년에는 1조원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성 식품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국한되어 있는 범위를 천연·유기식품과 건강보조·강화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외국의 제도와 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여 제도·인프라 구축, R&D 지원, 자금지원, 인력양성, 규제개선, 정책자금 투융자 등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 오던 농수산물 소재의 기능성 연구 지원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8. 저탄소 녹색시대 대비

정부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2020년까지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할 목표임을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바 있고,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시대에 비해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대책을 추진하고 식품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인벤토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푸드마일리지에 대한 식품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인증제의 식품분야 확대 적용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검토하는 한편, 녹색식생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업체의 자체적인 절감 노력 등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형 식품시스템 구축 전략은 녹색성장기반 확충(연구·조사·교육 강화, 식품업계 자율노력), 녹색관련 기술개발(신가공, 대체기술 및 융합기술 등 개발), 환경부하 감소(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 저탄

소 녹색시대에 대비한 식품산업의 대응에 대한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9. 소비 · 수요 창출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9년은 막걸리의 해였다. 기존의 시장과 가치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와 수요의 창출이 식품산업 분야에 보다 확대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그 간 소득향상 및 경제성장 등과 더불어 지속 성장해 왔으며,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다 진입 및 영세 경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영비 중 프라임 코스트(원료소싱 및 조리과정 비용)가 높은 비중(40~50%)을 차지하는 등 아직은 산업화가 미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식산업의 소비 ·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주요 과제로 식재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재료는 농수산업과 식품 · 외식산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농수산업 입장에서는 생산된 농수산물이 식재료가 되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식품 · 외식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원 ·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식재료의 단가 뿐 아니라 식재료의 품질, 수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식재료 산업은 농수산물 생산자와 수요처인 식품 · 외식업체 간 눈높이가 여러모로 차이를 보이는 게 실상이다. 이러한 식재료 산업 현황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면밀히 분석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가공식품은 첨단 기술 등의 접목이 용이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해외시장 확대 등의 시장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고급화, 건강 · 웰빙 지향 및 편의 추구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는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맞춤형 식품 등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중국은 무한한 수출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에 ‘오토코마에 두부’라는 컨셉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 2005년 출시된 이 제품은 출시 이듬해인 2006년에 40억엔, 2008년에 55억엔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일본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이 제품의 성공요인은 기존의 가격, 포장, 맛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두부시장의 신규 진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부에 남다른 세계관을 가미하였고, 남자와 두부라는 생똥맞은 컨셉으로 독창적인 신수요를 창출한 사례이다. 이렇듯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10. 식품 행정체계의 효율화

마지막으로 식품 행정체계를 짚고 싶다. 식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다. 생산부터, 유통·소비·안전·안보·영양·환경·통상·무역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활동 및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변화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한 두가지만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야말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식품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부터 추진 중에 있다. 2009년에 식품안전을 담당할 소비안전정책관실을 신설한 것을 토대로, 식품안전 관련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진행 중이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여 식품 문제를 범 국가적으로 관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능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고 새로운 기구의 구성 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식품행정체계의 효율화 부분도 정부와 민간, 소비자,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약 10가지 분야에 대한 식품산업의 발전과제와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많은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업계의 포럼을 제안한 바 있다. 식품업계와 학계, 소비자 등이 모두 모여 식품문제를 논하고, 우리 식품산업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과 글로벌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아우러져야 한다. 식품공업협회 등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주도하에 식품업계 의견을 모으고 또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